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김 기 출	직 급	서기관
소 속	국무조정실	연락처 (e-mail)	kmakkc@korea.kr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2016.2.22. ~ 2018.2.21.
훈련기관	Third Sector Research Centre(TSRC)		
훈련과제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 제목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요약	<p>1. 서론</p> <p>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2007년 50개로 시작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6년 말에 1700개를 상회할 만큼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을 내는 등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역량 부족,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미성숙,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 시민사회, 시민의 낮은 수준의 이해와 관심, 국가 지원정책 설계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등 비재정적 정책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영국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정책대안을 살펴본다.</p>		

2.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2006년 Defourny는 사회적기업을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경제적 지표로는 재화의 생산 판매 활동, 독립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 경영불가시 폐업을 감수하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최소한의 임금 노동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표로는 지역사회나 특정 인구집단 등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명시적 목표, 일단의 시민들이 자발적 의도로 착수한 이니셔티브, 자본 소유권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 활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관계자가 관여하는 참여적 성격, 제한적 이윤 배분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

3.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비교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제도적으로 영국은 의회주의 체제 국가인 반면,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라는 점과, 오랜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역사를 가진 영국에 비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군사 독재가 끝나면서 민주화되기 시작하는 등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목표와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영국이 제3섹터실 등 별도 기구를 내각에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주거, 사회복지,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제공과 NHS 비효율성 개선 등 제3섹터 전반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에 제한이 없고, 인증시스템이 아닌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노동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조하는 방식 추진하였고, 1997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 등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실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사회적기업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명칭도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추진 정책설계 의도 측면에서도 영국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 다른 정책 목표와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 충족 내지 사회적기업 고유의 다른 기본 가치(즉, 협력 및 상호 지원) 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가치지향적 접근을 한 반면 한국은 실업문제 해결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지향적 접근을 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영국은 정부의 통제가 적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강한 대신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받는 몇몇 유형의 다소 정형화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3.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기업이 설립된 이후 초창기 자리를 잡기 까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기업들이 공공부문 계약 등에 있어 입찰요건 및 절차 수행 등 능력 부족 문제 등 자본과 기술문제 지원을 위해 2007년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투자펀드(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 SEIF)는 보조금과 대출의 혼합 형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억 파운드 예산이 지원되었고, 신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컨설턴트 등 초기자금,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사업 계획 조력과 사업조직 지원, 입찰 지원 등 지속가능성 제고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 펀드를 통해 공공분야의 지원이 가장 취약했던 건강 서비스 분야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고, 이는 국민건강서비스(NHS)가 타겟으로

삼았던 몇몇의 수요를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SEIF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52%가 공공부문계약을 따내는 등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출 보다 주로 보조금의 형태의 지원이었던 탓에 기업들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 정책제언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이 갖는 문화적 배경과 역사의 차이로 인해 양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미래의 사회적기업의 창업자 육성,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에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 사회적기업에게 있어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주는 공공부문의 판로 개척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인증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금융지원에 있어 곧바로 시행에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립이 필요한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 방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